

투데이

# 25년간 93만명 전남 떠났다

### 3명중 1명 탈전남...2000년 이후 '여초 현상' 광주는 2008년 택지개발 이후 인구 순유입

전남의 인구가 30년 넘도록 빠져나 가면서 인구 세명 중 한명 꼴로 전남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광주는 지난 2008년 이후 인구 유입이 늘고 있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1980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전남의 인구 이동 추이를 살펴본 결과 전남은 외환위기로 귀농인구가 잠시 늘었던 1998년 단 한차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1237명이 많았고 지난 31년 동안 인구 순유출이 진행됐다. 전남 인구는 1980년 377만명에 달

했다. 광주가 1986년 직할시로 승격되면서 분리된 후 집계된 인구수만으로 살펴봐도 1987년 284만명에 달했던 전남의 총인구는 2011년 191만명으로 24년 동안 약 33%가 줄었다.

특히 1990년까지는 전체 인구 중 남성(126만명)이 여성(124만)보다 많았지만, 2000년 들어서는 남성(98만명)보다 여성(100만명)이 더 많은 '여초 현상'도 두드러지기 시작했다.

전남의 인구 유출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는 1987~1991년 사이로 5년

동안 매년 10만명 이상이 전남을 떠났다.

전남의 인구 유출도 2002년 이후부터는 감소 추세로 돌아서면서 지난 2011년에는 5222명이 전남을 나갔다.

광주도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광주로 들어온 사람보다 떠나는 사람이 더 많았지만 2008년부터는 인구 순유입이 진행됐다.

2008년 477명이 불과했던 순유입 규모는 대단위 택지개발이 활발해지면서 2009년 3108명, 2010년 3531명으로 대폭 늘었다가 지난해 1279명으로 증가폭이 다소 주춤해선 상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맛있게 버무려 우리 이웃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와 하나은행 호남영업본부 직원들이 29일 오전 광주전남지사 앞마당에서 소외계층에 전달할 김장김치(5000kg)를 버무리고 있다. /내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호남권 사회·인적관계망 전국 최고 10만명당 의료·복지시설수도 높아

지역격차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광역시·도 간, 광역경제권 간, 도내 시·군 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연구원은 29일 오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리는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상생발전방안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시·도 연구원이 인구, 소득, 시설, 주민행태 등 75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 인구의 경우 대전, 광주, 인천, 울산은 증가하는 반면 부산, 서울, 대구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GRDP(지역내총생산)는 동남권과 충청권이 높으며, 인구

10만명당 의료복지시설 수는 강원, 충청, 호남권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사회·인적관계망 수준은 호남·제주권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창조산업 연구개발과 문화산업 분야의 집중도는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뚜렷하게 높았다.

또 15개 시도별 전문가 94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역격차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시급한 방안으로 법제도 정비(31.3%), 지방분권 강화(29%) 등의 순으로 꼽았다.

책임연구원 김인희 연구위원은 "격차문제를 지역 내 격차, 시도 간 문제, 광역권 간 차이 등 다양한 공간 유형으로 세분화해 분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빛고을건강타운, 외국기관 벤치마킹 붐물

### 개원후 3년간 16개국서 1만5천명 견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광주를 대표하는 견학지로 떠오르면서 외국 방문객 유치 등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29일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개원 이후 지난 달까지 타지역과 외국에서 3만 5293명이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방문했다.

타 시·도 702개 기관에서 2만

672명이, 노르웨이와 일본 등 16개국 173개 기관에서 1만4621명이 각각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을 다녀갔다.

올 들어 지난 달까지는 타 시·도 93개 기관에서 2081명이, 외국 30개 기관에서 2699명 등 총 4780명이 찾았다.

최근에는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

보 등이 방문해 식당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이홍의 빛고을노인건강타운 원장은 "빛고을노인건강타운이 한국을 대표하는 노인복지시설로 소문나면서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어르신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한국의 노년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표시설로 가꾸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광주시, 환경오염 점검률 88%...적발률은 4.6%

### 정부 "단속방식 문제...합동평가에 실적 반영"

광주시는 올 1~9월까지 환경오염 물질 배출업소 점검률에서 88.2%로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2위에 오른 반면 적발률은 4.6%로 최하위권(13위)에 머물렀다.

반면 부산시는 점검률은 48.2%로 꼴찌였지만, 적발률은 8.9%로 전국 1위였다. 특히 올해 상반기 4대강 환경감시단에서 환경법 위반 업체를 특별 단속한 결과 적발률은 무려 30.5%에 이르렀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단속방식에 문제

가 있다고 보고, 내년부터 지자체 정 부합동평가에 단속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과 환경법령 위반업소 적발률을 평가 지표에 포함하기로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마쳤다.

배출업소 단속실적과 환경관리 실태가 우수한 광역·기초 자치단체를 각각 2곳과 3곳씩 선발해 표창과 포 상금을 줄 계획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지역은 검찰이 나 4대강 환경감시단과 합동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환경부가 올 3분기까지 16개 광역자치단체의 단속실적을 집계해 보니 연간 계획 대비 점검률이 6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특히 전체 점검업소 대비 적발률은 평균 6.0%로 환경부 산하 각 지방환경청의 올해 상반기 특별단속 적발률 30.5%보다 크게 낮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환경오염 단속업무가 지자체로 이양됐지만 산업에 대한 규제라는 인식이 강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보성군 강골마을 '기록사랑마을'로

### 국가기록원 지정식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보성군 강골마을을 '제5호 기록사랑마을'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보성 강골마을은 지난 100여년의 마을 역사를 알 수 있는 원암공유목(1899년 제작 추정), 소작대장과 농사일기, 1960~1980년대 교과서와 잡지 등 주요 기록물 500점을 소장하고 있다.

특히 이용옥 가족에서 발굴된 1900년대 전후반 고문서, 증조부 감찰기록, 소작증과 소작료 장부를 비롯해 이식대 가족 아치실대의 각종 영수증, 농사일기는 농촌 사회의 실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또 1800년대 말부터 주고받은

서신, 공립중학교 졸업장, 중학교 입학고사 시험지, 교과서, 사진앨범 등이 보존됐으며, 마을의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는 장례용품도 간직하고 있다.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열화정(제162호)과 이금재 가옥(제157호)도 있다.

이날 지정식에는 박성국 국가기록원장, 정중태 보성군수, 마을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국가기록정보 공동활용 교류협약식과 표지석 제막식 등이 함께 열렸다.

한편 국가기록원은 2008년부터 민간기록물을 후대에 안전하게 전승하고 기록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록사랑마을을 지정해 왔다. /보성=김용백기자 kyb@

## 광주시, 재난관리 '우수'...광역지자체 중 유일

광주시는 "소방방재청이 주관한 '2012 재난관리 실태점검'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해 전국 17개 시·도와 227개 시·군·구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국고보조금 1억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재난 예방, 대비, 대

응, 복구 등 5개 분야 45개 지표의 평가항목에 대해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합동평가단의 현장점검으로 이뤄졌다.

광주시는 골목길 등 취약지역 제설을 위한 열화칼슘 소(小)포장 배포, 제설차량 위치확인 시스템 운영, 하천 등 인명피해 우려 지역 파출소 지정 운영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박진표기자lucky@kwangju.co.kr

# 성명서

## 12.7(금) 전국 택시 25만대 서울 여의도 집결! "30만 택시종사자 전국비상합동총회" 개최!!

국회가 여야 만장일치로 삼일위에서 통과시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대중교통법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연기시킨 것은 버스업계의 불법 운행중단과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한 행위로 당장 철회하고 즉각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중교통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국토해양위원회(11.15), 법제사법위원회(11.21)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이다. 이를 국무총리가 재논의를 요구하고 국회의장이 본회의의 상정유보를 종용한 것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부정한 것이다.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수차례의 토론회 및 공청회를 통해 전문가 및 정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민주당합당이 대중교통육성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하였고, 새누리당도 간담회 등을 통해 법안통과를 약속하였음에도 버스업계에서 국민을 담보로 운행중단의 협박에 못 이겨 법안통과를 유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집권여당은 대중교통법안에 택시가 진입 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뒤로는 버스업계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한 정략적 판단으로 정부와 함께 법안 처리를 유보하는 이중적 태도를 취하였다. 야당 또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정부는 대중교통법안 통과지지를 위해 택시업계에 대해서 대선을 앞둔 포퓰리즘으로 버스업계를 비호하는

듯 한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고 국회가 시간을 준만큼 그 시간동안 택시를 설득할 대책이 아니라 버스업계를 설득할 대책을 제시하는 등 국회 본회의에서 대중교통법 통과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버스업계가 허위를 주장하는 버스 전용차로의 택시 진입, 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의 축소는 결코 있을 수 없다고 택시업계의 성명서 및 광고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 하였는데도 버스업계의 압력에 굴복한 국회를 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다.

국회가 버스업계의 불법을 동원한 물리적 행사와 정부의 거짓말에 굴복했다면 우리 택시단체 또한 그동안 국회를 믿고 원만한 법안처리를 위해 지속했던 태도를 벗고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다른 대안이 없다.

정부의 여론호도로 12월 초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11월 22일 양당의 합의안대로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12월7일(금) 전국 25만대 택시차량이 총 집결한 서울여의도 국회앞 상경 집회를 시작으로 우리 "광주지역 2만 여명의 택시종사자들은 상경 집회를 떠나 자체 투쟁"을 통하여 택시산업을 말살하려는 정부를 규탄하고 택시업계와의 약속을 하루 만에 뒤집은 정치권을 심판하는 총력투쟁에 돌입할 것이다.

2012. 11. 30.

**광주광역시택시운송사업조합 대표일동**  
광주 남구 송하동 128-5 / ☎ (062)676-8031 / 이사장 정등광